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27.(금) 11:40 <2.27(금) 석간> 배포 2026. 2. 26.(목)

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

- 영국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하여 합의 방안 지속 논의토록 권고
- 제29차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27(금) 양 기관에 권고하였다.

특히 同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개최하여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최종 의결하였다.

문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2.24일, 대통령)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330)
		담당자	서기관	김종락 (044-203-5332)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철영 (044-203-5530)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55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UAE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정산 협의 개요**

1. 한전-한수원 간 계약

○ 한수원은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10.5월)하여,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역무를 수행**

2. 공기 지연 발생

○ UAE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계획 준공일** 대비 **실제 준공일이 지연**

- **1~3호기**는 **각각 2~3년 지연**되었고, **4호기**는 '24.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나, 정산 협의 등 이슈로 **아직 준공되지 않음**

3. 정산 협의

○ **(발주처-한전)** 한전은 1~4호기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을 발주처(ENEC)에 청구하여, **협의 진행 중**

※ 한전이 발주처에 청구한 비용에는 협력사들이 한전에게 청구한 비용 포함

○ **(한전-한수원)** 한수원은 OSS 계약에 근거하여 **공기 지연 비용**(인건비 등) 및 OSS 계약 상 기본 역무 外 **추가 역무 수행 비용**을 한전에 청구

- 양 기관 간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수원은 OSS 계약에 근거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청구 중재 신청**('25.5월)